중공업·車 등 제조업 강성노조시대… 내년 노사 '가시밭길'

현대重 지부장에 강성성향 조경근씨 공약으로 '정년연장 준비' 등 제시 임단협서 노조입장 굽히지 않을 듯

기아차·현대차·한국지엠, 선거앞둬 모두 강경파 새 지부장 선출 전망 내년 노조갈등, 올 보다 심화 예고

조경근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당선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국내 제조업계가 내년에도 노사 갈등으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지부장이 강성 성향의 조경근 씨가 선출된데 이어 자동차 업계도 강성 성향의 새 노조 집행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3기(23대) 임원 선거 결과, 조경근 지부장이 최종 당선됐다. 조 지부장은 현 박근태 지부장과 같은 분과동지연대회 소속으로 소위 '강성' 성향으로 향후 임단협에서 사측과의 현재 대립각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지부장 당선자는 현재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조 지부장은 선거기간 '민주노조 계승'을 구호로 조합원의 임금과 보편적 복지 확대, 통상임금 빠른 승소를 위한 활동 강화, 정년연장 제도적 준비, 현대중공업그룹 공동교섭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사측과 진행 중인 임단협에서 노조 측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매년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아차에 이어 현대차와 한국지엠 노조도 3일 새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모두 강경파가 새 지부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일자리 전환과 신차 물량 배정 등 업체마다 노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자칫 강성 노조가 들어설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한 갈등에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판매량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위기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3일에는 향후 2년간 현대차노조를 이끌 지부장선거에 실리중도와 강성 성향 후보 2명이 선거에 돌입한다.

'실리중도' 성향인 이상수 후보는 현장조직 '현장노동자' 소속으로 3대 노조 수석 부지부장을 지냈다. 그는 호봉승급분 재조정으로 고정임금 강화, 실질적 정년연장, 4차 산업 대비 고용안정 확보, 여성조합원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성 성향인 문용문 후보는 '민주현장투쟁위원회' 소속으로 4대 현대차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상여금 150% 통상임금 포함, 4차 산업 정책연구소 설립, '7+7 노동시간' 도입, 총고용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이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2위 문 후보와 3, 4위 후보가 모두 강성 후보였다는 점에서 결선투표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하긴 이른상황이다.

올해 노사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한국지엠도 1차 투표결과 강성 성향 두 명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갑 후보와 안규백 후보 모두 강성 성향으로 새 집행부가 결정되면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문제와 10월 중단된 임협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 노조가 들어설 경우 부분·전면 파업을 계속하며 사측을 압박했던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달 30일 강성 노조 출범과 동시에 사측과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기아차 노조는 집행부를 꾸리자마자 조속한 임협 재개와 조합원 징계에 대한 사측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만약 새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 경우 신형 인기 차종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세기 동안 무노조 경영이 유지됐던 삼성전자도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내년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초대 위원장을 맡은 진윤석 위원장은 ▲특권 없는 노조 ▲상시로 감시받고 쉽게 집행부가 교체되는 노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노조 ▲제대로 일하는 노조 ▲상생과 투쟁을 양손에 쥐는 노조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투쟁 과제로 ▲급여 및 성과급 산정 근거·기준 명확화 ▲고과와 승진의 무기화 방지 ▲퇴사 권고(상시적 구조조정) 방지 ▲일방적 강요 문화 철폐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회사의 불법과 경영 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장서는 건 맞다"면서도 "다만 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대화보다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회사와 노조 모두 공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떨어진 나뭇잎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와 함께 강풍이 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도로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규제강화' 기업유출 요인 추가제공

>> 1면 '中企발목 화관法…'서 계속

특히 일본, 중국 등의 반격에 경쟁력을 키우기는 커녕, 규제 강화로 오히려 국내를 등지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요인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엄습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법 이행시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기술인력 기준 등을 주로 꼽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 시행전에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고, 설치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통풍·냉방장치, 계측설비 등 법에 규정된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관법이 다음달부터 그대로 시행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나올 당·정·청의 관련 대책과 별도로 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시 화평법·화관법 적용을 완화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지정감사인 과도한 회계보수 등 실태점검

금융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 공동 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등 집중점검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에 대해 과도한 보수 등 감사계약 실태를 점검한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된 가운데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지정취소는 물론 감사품질감리를 실시하는 등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시간당 보수나 감사시간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늘어났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감사계약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회사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한다.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이 재지정된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취소되고,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과 함께 감사품질감리를 받게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공인회계사회나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회사나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도 부여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내년 '퀀텀점프'통해 한단계 더 도약"

Sh수협은행 출범 3주년 기념식 이동빈 행장, 지속성장 거듭 강조

"고객 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의 이익과 성공을 뒷받침하는 영업문화를 조성하고 디지털금융을 선도하는 은행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은 2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Sh수협은행 출범 3주년 기념식'에서 지속 성장을 거듭하자며 이 같이 강조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 다음해 우리은행 출신의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취임하면서 리테일금융과 고객기반 확대를 통해 균형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수협은행은 출범 3년 만에 총자산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3조7000억원, 1760억원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고객 수 역시 2016년 말 198만명에서 지난 10월말 기준 300만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수협은행은 핀테크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디지털뱅크 전환 역시 추진했고 미얀마에 소액대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 행장은 "아직 환골탈태(換骨奪胎)라고 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퀀텀점프'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지속성장을 거듭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수협이 하루빨리 본질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산전문 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